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 271 회

제 2 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이병철 의원

나. 황경아 의원

다. 박주화 의원

라. 이효성 의원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 | |
|---|-----|
| 1.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면 |
| 가. 이병철 의원(일괄질문) | 2면 |
|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 8면 |
| 나. 황경아 의원(일괄질문) | 13면 |
|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 18면 |
| 다. 박주화 의원(일괄질문) | 21면 |
|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 25면 |
| 라. 이효성 의원(일괄질문) | 31면 |
|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행정부시장 이택구, 부교육감 김진수) | 35면 |
| 2. 휴회의 건 | 44면 |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둔산더샵 입주자협의회 용문초 추진위원회, (사)대전척수장애인협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대전근육장애인협회, 대전점자도서관, (사)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연광실업보호작업장 등 9개 단체 130여 명의 회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2분)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이병철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 박주화 의원님, 이호성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이병철 의원(일괄질문)

(10시 03분)

○의장 이상래 먼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제4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민 여러분께서 부여한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시는 현안을 고민해 보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용문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동호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헌법 제31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은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고 지역사회와 통합과 발전을 앞당기는 근간입니다.

특히 초등교육은 아이들의 인간관계 발달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학습의 기초를 다지는, 어찌 보면 한 인간의 생애에서 있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교육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초등교육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과 양질의 교육환경이 마땅히 제공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당할 우려가 있기에 용문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82개 행정동 중에 초등학교가 없는 행정동은 용문동, 중앙동, 흥도동 3곳입니다.

그나마 중앙동은 핵심 주거지역의 500m 내외에 삼성초등학교와 신흥초등학교 등이 있고 흥도동은 근거리에 동산초등학교와 성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문동의 경우 재건축 지역인 1·2·3구역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탄방초, 가장초가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아이들이 보도로 통학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특히 상습정체구간인 용문역 사거리 중심으로 차량 이동량이 많고 해당 통학로가 매년 교통자·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는 보행자 사고 상습다발지역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며 매년 증가해왔고 2020년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정부가 발표·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지난 4월 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도를 건넌 초등학생 4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아이들의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설동호 교육감께서는 용문초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만큼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 자리를 빌려 용문초등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과밀학교를 방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용문동은 재건축 지역인 1·2·3구역 2,800여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재건축 1개소, 재개발 1개소, 기타 공공주택 5개소, 가로주택 정비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있어 총 4,300세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용문동 재건축 1·2·3구역에 대한 분양이 100% 완료되면 학생 수 산출을 다시 해 신설을 재검토하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까지 함께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용문초 신설에 있어 가장 난관으로 생각했던 중앙투자심사가 법 개정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되면서 총사업비 300억 미만의 소규모학교 또는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되고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만으로도 신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복합시설과 함께 용문초등학교를 신설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용문초등학교를 신설하면서 수영장이 함께 있는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아이들은 의무교육인 생존수영을 포함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더 좋은 환경에서 습득할 수 있고 주민들은 학교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더 편리한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어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신설과 주민복합 공유공간 조성은 서철모 서구청장의 용문동 지역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는다면 용문초등학교 신설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교육청이 용문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용문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제가 제안한 방법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의지가 있으신지 용문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시 문화예술시설 확충에 대한 현안을 이장우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에 밑바탕이 될 10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를 바탕으로 사회·문화·환

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도로 성장하여 도시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대한민국과 세계도시 문화를 선도하는 일류도시 대전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세부 추진전략으로 문화도시 분야에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하셨기에 현재 우리 시에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살펴보고 시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지난달 18일 동·서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도심 내 수변 및 녹지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도심 속 부지로 중촌근린공원에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부족한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아직 우리 시는 문화예술시설이 타 지역과 비교해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에 울산과 세종을 제외하고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우리 시가 문화를 선도하는 일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시설 확충은 물론 문화도시로서의 정책성 확립 및 장기적인 로드맵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 추가로 문화예술시설이 건립된다면 어느 지역에 건립되어야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시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하며 수요가 많고 접근성이 용이한 보다 합리적인 입지조건을 가진 곳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관련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수요 연령은 20대로 90.6%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했고 비교적 20대 미만부터 40대까지 관람률이 높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통계를 먼저 제시한 이유는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 수요가 높으나 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둔산지구, 노은지구, 도안지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거지역 3곳을 빅데이터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복지향상을 위해 도안지구 문화예술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포털사이트에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시설을 검색하면 나오는 지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안지구에는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도안지구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안지구의 총인구는 7만 3,924명으로 이 중 20대 미만은 1만 7,256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문화예술의 수요도가 높은 20대, 30대, 40대 비중도 45.5%로 둔산지구 44.1%, 노은지구 43.6%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안지구 유동인구 분석결과 하루 평균 40만 9,102명, 일일 시간당 평균 1만 7,046명으로 30대 19.4%, 20대 18.7%로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이 활발한 20대, 30대 유동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더불어 도안지구가 다른 지구와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여가 수요도가 높다는 걸 방증하는 데이터는 또 있습니다.

2022년 3곳 지구의 업종별 매출액 현황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매출액 비중이 도안지구에서 가장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둔산지구와 비교해봐도 큰 차이가 없으며 인구가 비슷한 노은지구와 비교했을 때 도안지구 약 22억, 노은지구 약 5억으로 매출액이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문화예술 수요도가 높은 연령층의 비중과 유동인구, 관련 매출액이 높은 도안지구에 문화예술시설이 없다는 건 우리 시가 충분히 시설 확충에 대해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안지구 개발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3단계 개발까지 완료되면 노은지구를 뛰어넘고 둔산지구와 맞먹는 대전의 핵심 주거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문화예술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도안지구는 2호선 트램이 관통할 예정이어서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기도 수월하고 인근 교촌동 일원에 대한 역대 최대규모 국가산업단지인 나노·반도체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충분히 타 시·도에서 인구유입도 가능하므로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안지구의 중심인 도안동에는 음대와 미대로 유명한 목원대가 있고 인근에는 충남대, 한밭대, 배재대, 건양대가 자리 잡고 있어 도안지구는 우리 학생들도 편리하게 문화예술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아직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당연히 문화예술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고민해야 할 부분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문화예술시설들이 효율적이고 활발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장님의 포부대로 대한민국과 세계도시문화를 선도하는 일류도시 대

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계획 중인 문화시설 확충방안과 어떠한 로드맵으로 문화예술 선도도시를 준비하고 있는지, 앞서 제가 제안한 도안지구 문화예술시설 확충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반려인구에 따른 반려동물 복지 지원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공원이 지정됐고 광역단체가 직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유일하며 상서동 반려동물놀이터를 운영해 반려동물 복지환경 측면으로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노력으로 대전시는 전국에서 선도적인 반려동물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만 나아가 명실상부 최고의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점검해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국 606만 가구 중 25.9%, 약 155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사회지표조사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전국 반려가구 수치를 웃도는 34.8%로 65만 가구 중 약 23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반려가구 수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지표조사에 따르면 2019년 17.8%에서 2020년 21.6%, 2021년에는 34.8%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반려인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반려동물 지원정책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에 따른 정책이 반려 양육자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유기동물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그 취지에 맞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원사업들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니 2022년 집행률이 60~70%대로 다른 사업에 비해 비교적 낮았고 올해 집행액을 보더라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보통 사업목표를 잘못 설정했는지 아니면 정책홍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데 홍보와 관련해 부족함이 없는지 관련부서에서 점검해 주시고 시민들께서 정책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보험연구원의 반려동물보험시장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구의 82.9%가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려동물의 고령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양육가구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8%에 불과합니다.

양육가구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반려동물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에 현 정부도 펫보험 활성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당국 등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만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약자에 대해서도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의료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펫보험 활성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반려동물 공약사항으로 시민요구를 반영한 반려동물 정책발굴 및 시민공론화 협의체 운영을 약속하셨습니다.

관련해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과 나아가 본 의원이 제안한 펫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 중 현장에서 만나 뵈 시민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시민 여러분을 대신해 질문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10시 23분)

○의장 이상래 이어서 이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병철 의원님께서 가칭 용문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부의 학교 설립 기준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심사 지침상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예상 학생 수, 통학구역 내 학생 수 증감 추이 등을 확인하여 인근학교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칭 용문초등학교 신설의 경우 용문동 1·2·3구역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을 통학구역 내의 학교인 대전탄방초에 배치되는지와 학교 설립 가능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용문동 1·2·3구역 개발사업에 따른 증가학생은 대전탄방초의 여유교실을 활용하면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문동, 가장동 인근지역 개발계획이 진행되어도 증가학생 폭이 크지 않아 기존 학교에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한 통학환경은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0억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과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한 학교 설립의 경우 가칭 용문초등학교는 높은 용지비와 건축비 상승으로 300억 미만의 소규모사업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신설학교의 학교복합시설화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제외되지만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제반여건이 충족되면 지자체와 협의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칭 용문초등학교 신설은 인근지역 개발상황, 증가 예상 학생 수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학교 설립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합, 입주민대표 등과도 적극 소통하여 학교 설립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이병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 도안지구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대전시 반려동물의 복지지원 강화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도안지구 문화예술시설 확충 중에 시에서 추진 계획 중인 문화예술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로드맵, 도안지구 문화예술시설 확충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민의 문화예술 수요에 비해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일류도시의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의 인구 1만 명당 문화시설 수가 0.43개로 17개 시·도 중에 열두 번째, 특·광역시 중 세 번째입니다만 사실상 문화기반시설로 보면 울산 빼고는 대전시가 최하위권으로 보입니다.

또 인구 대비로 볼 때는 사실상 광주가 문화시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서울, 대전입니다만 사실상 대전의 문화기반시설은 최하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언론인 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촌근린공원에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원로예술 특히 대전을 빛낸, 대전 출신, 대전에서 활동한 세계적인 화가들 미술관을 유치해서 중촌근린공원을 하나의 세계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은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먼저 디자인 후에 설계를 실시해서 그동안 세계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 유럽 분관에 버금가는 명품건축물과 운영시스템을 갖춰서 세계적인 문화시설로 육성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옛 한전보급소를 매입해서, 10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복합문화전시 공간으로 조성하고 소재중앙공원에는 이종수 선생 유족분들께서 도자기를 기증하시기로 하고 이미 협약을 맺어서 미술관을 건립해서 문화시설 확충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대흥동 테미예술창작센터에 제2대전문학관 그리고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전기에너지전시관도 매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웹툰 클러스터 구축,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등 다양한 시설들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안지구 내 문화예술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안지구는 당연히 신도시 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정주여건으로는 대전에서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인구증가 면에서도 굉장히 높고 경제적인 요소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반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시설은 애당초 신도시를 종합적으로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안지구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설계로 이 도시를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화예술·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배치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안지구는 특히 호수공원이라는 대형사업이 들어가 있고 또 호수공원을 포함한, 습지 지정 포함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크게 걱정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도 도안에는 대전시립미술관 또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작은내수변공원 내에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용계동에 짓는 종합운동장에 기존의 종합운동장 포함한 스포츠시설을 대대적으로 집어넣게 되는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27년 전에 준공해야 될 거로 봅니다.

지금 대전시에 짓고 있는 베이스볼드림파크, 야구장도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주 변경내용이 야구가 없는 시즌에는 문화예술공연이 가능하도록 무대설치나 전력공급, 나아가서 공연에 대기하는 대기자실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은 기존의 종합운동장 하나만의 기능을 가지고는 예산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종합운동장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하고 또 그런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문화예술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설계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월드컵경기장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월드컵경기장을 지었을 때 만약 문화예술공연이나 이런 다양한 시설을 갖기 위한 기능을 그 당시에 고민했다면 월드컵경기장도 프로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을 훨씬 높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도안지구 내에는 종합운동장 포함한 종합스포츠타운을 할 때 문화예술시설을 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안지구는 국가산업단지 160만 평 나노반도체산단이 지정돼 있고 또 대전교도소가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교도소 포함한 국가산업단지 안에 할 때 저는 마이스 산업을 대비한 대규모 회의 산업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바이어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호텔 이런 것들을 겸하고 거기에 플러스 문화시설도 결합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안신도시는 지금 대전시 중에 가장 새로운 신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많고 지금 당장 실현은 어렵습니다만 추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서 의원님 우려하시는 이런 시설들을 잘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려인구 증가에 대비한 지원사업의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가능시설을 확대

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또 성숙한 동물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갖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책임 강화와 유실,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과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기동물 감소율 전국 1위, 동물등록률 광역시 2위, 제4회 동물복지대상 수상 등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대전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29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전시를 선진지 견학차 방문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반려동물 정책을 강화해야겠다는 것은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사업추진 방식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장형 등록 지원 같은 경우는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동물병원 등 관련업체들 또 SNS를 통한 홍보 이런 것들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도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을 확대한다든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및 사회적약자 지원 필요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반려인들이 반려동물로 인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지만 비싼 의료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유기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약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현재 시에서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증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는 분들, 차상위계층 분들을 위해서 약 500명가량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질병검사, 치료 등을 하고 있고요, 사용 의료비의 80%,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대전시가 종합행정서비스를 하는 지방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을 전 분야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더 획기적으로 높이고 싶어도 어려운 사정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보험을 포함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정책들을 좀 더 강화해서 사회적약자나 장애를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 정책이나 대전시의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요구를 반영한 반려동물 정책 발굴 및 시민공론화 협의체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는 작년 말 반려동물 양육자 3,800명에 대한 정책 수요조사를 했고 그 수요조사의 기초에 의하면 동물보호센터 입양, 특히 이게 가장 필요한 시설로 파악됐고요, 동물놀이터가 두 번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 시민들 의견, 여론조사를 해보고 반려인들과 비반려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두가 행복한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공론화 협의체 이런 것을 구성하다 보면 공론화하다가 하세월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즉시 시행하는 것이 훨씬 정책을 실효성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시민공론화 협의체 부분은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이병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병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나. 황경아 의원(일괄질문)

(10시 42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황경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황경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장애인 여러분들 그리고 단체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숙한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대응과 재난안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방안과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대응과 재난안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의 재난대응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실효성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지원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여 장애인 유형 및 취약계층별 현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

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올해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계획에 따르면 2024년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층별, 유형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드린 사항을 반영해 주신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종합계획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업무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업무추진체계가 충분한 소통과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말합니다.

안전 환경 지원 조례의 안전취약계층은 안전에 취약하다는 공통적인 특징 외에는 나이, 처한 환경, 소관부서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한 재난대응이라고 했을 때 최적화된 전담 소관부서는 과연 어디일까요.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과, 재난대응과 관련해서는 재난 관련부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장애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두 부서가 소통을 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협업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안전환경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공문을 보내고 취합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인지, 의견조치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교류를 통해 해당 사안을 마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지원 추진을 위한 부서 간 업무공유 방법과 협업에 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에 대한 업무추진 의지는 예산수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존 사업에 의해 수립하고 집행되어 온 예산을 임시방편으로 짜맞추어 편성하는 것이 아닌 종합계획에 의해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3년 예산수립 현황을 점검하고 2024년 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유관단체 등과의 협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의 상황은 일상생활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민간 이용시설이나 안전유관단체와 평소 재난대응과

재난안전 전달체계 구축 및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자립생활센터 등 장애 관련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재난으로 피해 입은 장애인을 돕기 위해 2010년 전국자립생활협의회와 협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전국의 450개 자립생활센터와 협력하여 재난 발생에 따른 접근과 기능적 요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장애조직과 연결하여 장애인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에서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민관 협업 및 효율적인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활용한 민관 협업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처음 언급한 제268회 시정질문에서 보충질문 시 재난관리 장애전담부서에 대하여 언급을 했던 점을 기억하시고 계시지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장애전담조직을 예로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통합조정부서라는 장애전담조직에서 비상시 장애인들이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 교육, 자원 및 전략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 시에도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과 재난안전체계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전취약계층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과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현재의 조직체계로는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각 부서의 소관 업무로 인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기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체계적인 안전취약계층 재난지원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중도장애인이란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장애는 80% 이상이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도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매우 깁니다.

재활선진국의 경우 평균 재원일수가 2~7개월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평균 28.7개월이며 절반 이상이 2년 넘게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재활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갈 준비가 되지 않은 당사자는 다시 입원을 선택하게 되고 입원 기간은 장기화됩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애 발생 전의 생활과도 단절이 되고 결국 재활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입·퇴원을 반복하는 가히 재활난민이 되기도 합니다.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면 장기간의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가족들이 심리적인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손상 전 11%인 무직률이 손상 후 42%로 증가하고 간병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이 직장을 퇴사하는 경우가 43.8%인 절반에 이릅니다.

이로 인한 가족 소득감소는 63.2%에 이릅니다.

손상 이후 대부분의 가족인 73.5%가 갈등을 경험합니다.

갈등의 원인은 간병으로 인한 에너지 소진 및 스트레스가 44.7%, 경제적 원인 등이 30.8%로 나타났습니다.

체계화된 사회복지 지원의 부재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불러오고 장애 당사자의 무기력과 더불어 가족기능 상실로까지 이어집니다.

후천적인 장애인의 사회복지 지원은 사회경제적 비용과 관련되어 초기 적극 개입 여부가 비용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척수장애인의 탈의료화를 위해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귀까지 지원하여 척수장애인들이 조기 사회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각 나라의 현실에 맞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재활원,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병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척수장애인 대상 사회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장애인단에서부터 사회복지까지 종합적으로 척수장애인 및 중도장애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체계는 찾기 어렵다고 당사자 및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중도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절실함을 각종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중도장애인에 대한 실태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지 지원체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중도장애인 사회복지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진복지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는 척수손상병동에서 급성기 관리와 재활서비스가 끝나고 전환재활서비스를 통해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단기거주시설 등 사고로 인해 장애가 생긴 이후 일상생활 및 사회로의 복귀를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직업재활을 위한 취업 및 고용 지원, 일상생활을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단기거주시설, 지속적인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헬스장 등 기능적인 사회복귀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인 외상에 대처하기 위한 상담 지원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남대병원 재활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상홈을 이용한 중증척수장애인 맞춤형 사회복귀 지원모델을 개발했으며 중증척수장애인 생활훈련지침서, 일상홈 사용매뉴얼까지 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원을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충남대병원 재활센터에서 실시한 사회복귀 시범사업을 대전시에서 확대·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복지수범도시로 그동안 매년 1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에게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넘어야 할 문턱이 너무나 많고 높습니다.

비장애인에겐 그저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중증장애인에겐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려운 재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장애인의 복지와 안전한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갖추어나가고 살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빠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11시 01분)

○의장 이상래 이어서 황경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까.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대응 추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늘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황경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관련 추진상황 중 부서 간 업무공유 방법 및 협업과 관련해서 또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을 위한 예산수립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는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해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회의 등 부서 간 지속적 의견교환, 소통,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계획에 따라 부서 간 공유와 실적관리 등을 시민안전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안전실과 다른 조직 간의 협업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든 시민의 안전은 시민안전실이 사실상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실이 주도가 돼서 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을 위한 예산현황은 2023년도 기준 81억 7천만 원으로 8개 부서에서 4개 분야 17개 과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수요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을 위한 정책 발굴과 예산을 반영해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4대 분야 17개 과제 중에는 소방, 가스, 전기시설 등 일상 속 안전생활 지원강화 분야, 안전취약시설 환경개선 후 안전인프라 기반구축, 계층별 맞춤형 안전물품 제공, 안전교육 종합안전 점검 등 관련된 4대 분야 17개 과제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 유관기관 등과의 민·관 협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은 일상생활 중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안

전유관단체와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안전문화추진대전협의회와 대전재난안전네트워크,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안전유관단체와 함께 각종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협력활동, 재난대응 합동훈련, 교육 홍보, 재난안전 정보교류, 연계활동 캠페인 등 유기적인 협업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협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라도 이 분야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잘 보완해서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안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 전담조직 설치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민안전실에 이런 조직을 함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전담체계를 따로 하는 게 좋은지는 용역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전담조직 설치와 관련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7월부터 5개월간 실시하기 때문에 용역 마치는 대로 의원님과, 많은 관련 단체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중도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지 지원체계 현황과 관련해서 물어 주셨는데 2022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시 중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6%로 5만 8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10% 내외가 될 것 같고 대부분은 후천적 장애, 질병이나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기까지 반드시 대부분은 장애를 한번 겪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안경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다 사실상 시력장애가 오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장애는 한번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그런 것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같은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중도장애인, 사시다 중간에 장애가 생겼을 때 특히 절망감이나 어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재활, 직업상담에서 상당히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맞겠다고 보고 주택공급이나 주택지원 관련해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의원님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또 우리 시는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의료재

활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과 연계해서 사회복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많이 해도 역시 이 문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재활기관에 조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전·충남권역 의료재활센터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인 충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의 의료재활병원과 각 구별로 보건소 내 재활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역사회 중심 재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 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 활동 지원은 26개소, 자립생활센터 7개소,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재활·직업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기관 설립 이런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한다든지 또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서 이 문제도 앞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중도장애인분들이 재활하고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는 단순한 의료기관에서의 퇴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를 겪게 된 이후에 갖는 신체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 기능과 결합되는 상황 이런 것들의 재조직화가 필요하고 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 직업활동에 제대로 복귀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중도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 현재 추진 중인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과 조금 더 많은 의견교환을 통해서 내실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도장애인의 재활치료 후에 단절 없이 지역사회 재활치료에 연계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적극적으로 쏟겠습니다.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시설 도입 제안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는데요, 중도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도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단지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센터에서 실시한 사회복귀시범사업과 서울시 및 국립재활원 등에서 시범운영한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내에 건강력을 포함한 다양한 복귀 프로그램 지원은 재활과정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의료기관, 특히 충남대병원이든 어떤 의료기관의 수익구조에

따른 운영에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원들이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의료영역 외에 지원시스템과 연계하는 문제에 제약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과연 의료기관의 수익구조 운영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중앙정부의 수익구조에 따른 재활센터 운영 이런 것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대전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이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중앙정부가 더 정책과 예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타 지역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지원제도를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을 연계해서 강화하는 방안, 그래서 중도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가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황경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황경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 박주화 의원(일괄질문)

(11시 14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의 현안 사안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대전천 정비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3대 하천 중 하나인 대전천은 이미 국가하천으로 관리되던 갑천과 유등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하천으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전천은 전국 국가하천 중 하상도로가 있는 유일한 하천입니다.

물론 하상도로로 인한 교통편익이 있지만 구조적 문제로 해마다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또한 대전천 천변은 떡밥을 미끼로 한 낚시가 금지되어 있지만 떡밥 낚시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쓰레기를 어질러놓고 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하천 주변 청소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나마 대전천의 일부 구간이 2020년에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하천정비·유지·개선 사업에 국비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반가운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의 핵심사업인 대전천 통합하천사업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7년까지 18개 사업에 3,514억 원이 투자되어 친환경 명품하천으로 바뀔 것이라는 시장님의 발표였습니다.

대전천은 앞으로 하상도로, 인공보, 호환블록 등이 사라질 예정이며 보다 합리적인 수계 관리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 수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수·치수·환경·친수·도시교통 등 5대 분야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천 전 구간 수질이 1급수로 개선되고 대청호 원수를 1일 4만 톤씩 끌어올려 하루 10만 톤의 풍부한 수량을 유지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상도로 대체시설로 제방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에도 제방 여유높이가 1m 이상 확보되는 등 대전천이 안전한 하천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시의 이러한 계획과 비전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큰 기대가 됩니다만 10년을 바라보고 있는 장기계획에 밀려 지금 당장 필요한 하천시설 정비, 청소관리 등 필요사업이 소홀해지지 않는을까, 또 이로 인해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6월 말이면 장마가 시작될 것이고 여기에 올 여름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대전천은 또다시 범람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시장님, 저는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현재 필요한 정비사업도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천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아직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전천 일부 구간도 국가하천으로 조속히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명품하천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대전천 통합하천 사업 발표가 나온

지 반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먼저, 이 거시적 사업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모아주시길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린 대전천 하천시설 정비, 홍수대책 방안, 청소관리 필요성과 대전천 일부 구간 국가하천 승격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천의 태봉보 철거사업을 시작으로 3대 하천에서 인공보가 하나둘 사라지면 점점 더 많은 종류의 멸종위기종이 대전의 하천에서 발견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일류 환경도시 대전의 비전이 실현되길 기대하며,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원 조직진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5년 조직개편을 통해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여성가족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현재 대전에는 본원을 비롯해 동부, 남부, 북부 등 총 4곳의 여성가족원이 있습니다.

조직개편 당시 대전시는 평생교육문화센터가 하고 있던 평생교육기능을 여성가족원이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여성역량 강화와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남성·아동을 포함한 가족 전용공간 활용 등을 목적으로 기능개편을 계획했습니다.

조직개편이 논의될 당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이 늘어났고 2011년 출범한 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의 명칭 혼선과 기능 및 역할 중복에 대한 기능 재정립 등 사회적 요구에도 대응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민선 6기 약속사업의 하나였던 여성 전담기관 설치가 함께 맞물리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행정과정이 논란이 됐었고 시민의견 수렴 결과 시민의 공감을 받지 못했던 여성가족원이라는 명칭으로 조직이 개편된 지 벌써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지난해 전면적인 조직개편으로 민선 8기 시정방향의 큰 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제는 사업기관의 기능점검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여성가족원의 교육과정은 전문지도자 양성, 직업훈련, 가정친화 및 역량 강화, 문화아카데미 등 총 4개의 과정이 운영 중입니다.

2015년 조직개편 전 평생교육문화센터 과정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취업·창업과정, 실용생활과정, 예술교양과정, 건강과정, 어학과정, 가정친화과정

이 운영되던 그 당시에 비해 어떤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과정을 구분하는 카테고리의 명칭이 조금 달라졌을 뿐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여성의 이름이 붙은 조직명칭 때문에 사회적 시선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2020년에 발표한 대전여성가족원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한 여성의 요구들이 다층화되고 있고 글로벌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성주류화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우리 시 여성가족원의 목적은 여성발전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평등이라는 사회적·시대적 요구, 다양한 지역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여성가족원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층적 관점의 접근과 연구 역시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여성가족원이 하고 있는 주된 사업이 여전히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고 조직개편 당시 추구하던 정책목표가 2023년 현재에도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여성가족원의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조직진단을 통해 현재 여성가족원의 역할과 기능을 면밀히 분석한 후 개편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여성가족원에 대한 정밀한 조직진단을 해주시고 조직진단 후 여성가족원 명칭 변경을 포함한 조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3년 6월 현재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현황을 보면 대전시에서는 한밭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동구 6곳, 서구 5곳, 유성구 7곳, 대덕구 3곳 등 총 24곳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대덕구 석봉도서관과 유성구 전민도서관도 개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설립 예정인 제2시립도서관인 동대전시립도서관은 지난 3월 14일 첫 삽을 뜨고 2024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구 관저동에도 제3시립도서관 건립추진 소식이 들리면서 대전에는 총 3개의 시립도서관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한밭도서관을 제외하고 중구에는 공공도서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1989년에 한밭도서관이 건립된 이후 한밭도서관이 있다는 이유로 중구 지역엔 오히려 단 1곳의 공립도서관도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중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구 중촌벤처밸리 내부 기반시설로 지역 내 도서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은 시민 삶의 질과 바로 연계되는 공간입니다.

큰 규모의 좋은 도서관 1곳도 중요하지만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의 공공도서관이 시민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을 때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됩니다.

대전광역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대전은 시민 1인당 장서 수가 2.2권으로 8대 특·광역시 중 1위이고 대전지역 도서관 1곳당 대출 권 수도 전국 1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도서관 1곳당 대전 인구수는 5만 5,856명으로 전국 평균 4만 2,747명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대전시에 더 많은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중구는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가 7만 6,780명으로 대전 평균에 비해서도 훨씬 높습니다.

향후 다른 지역의 도서관이 늘어나면 중구 도서관 1곳이 감당해야 하는 인구수는 상대적으로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시장님, 시민 삶의 질과 연결되는 공공도서관 확충이 필요합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민선 8기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중구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전시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11시 28분)

○의장 이상래 이어서 박주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박주화 의원님께서 대전천 정비사업, 여성가

죽원 조직진단,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특히 문화시설 확충에 노력해 주시는 박주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의 정비사업 관련해서 장기적인 플랜도 중요하지만 현재 필요한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도 공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등천이나 갑천은 유량이 대전천보다 풍부한 편입니다.

특히 대전천은 상류 지역의 산들이 물을 빨아들이는 산들로 있어서 사실 대전천이 장마철 지나고 나면 유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성호 시장님 때 한밭대교인가에서 펌핑해서 물을 흐르게 했는데 이쪽의 물이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흘러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예산 대비보다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대전천은 특히 동구와 중구를 중간에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유등천, 갑천과 함께 대전의 3대 하천의 근원이고 그래서 3대 하천 전체를 명품으로 계속 가꿔나가는 것은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12월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을 저희가 수립했고 대전천 정비사업에 포함됐습니다.

3대 하천 푸른물길 선도사업은 대전천 데크 정비나 바닥 포장, 제방 복원 등 이런 것을 계속 정비를 해오고 있고요.

2027년까지인데 사실은 이게 좀 시간이 길게, 멀게 느껴집니다.

대전천 통합하천사업이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514억을 들여서 5대 분야 18개 세부과제를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천을 친환경 명품하천으로 꾸미고 또 한편으로는 재해 없는 하천으로 가기 위해서 강력한 실행력을 지금 확보했다고 보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 대전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대전천 하상에 지금 기형적으로 하상도로가 있는데 이게 광역시 정도에 있어서 하상에 도로가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데 아무래도 교통 문제 때문에 철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대체도로를 먼저 완성하고 하상도로를 철거하는 순으로, 최종적으로는 대전천도 하상도로가 없는 완전 친환경 하천으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대신에 시민들 불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 교통정책을 하고 후 하상도로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40억 원 정도 확보해서 하천 시설물들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요, 또 매년 12억 원으로 연중 상시 전 구간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니다 보면 대전천에 지저분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고, 사실은 저도 시장이 되기 전에 둔산에서 대전천을 많이 걸어 봤기 때문에 실태를 직접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도 간부들하고 한번 가서 직접 보면 충분히 정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지 않으면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가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상당히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어느 곳에 대개 어떤 물들이 어땠고 어느 시기에 어디가 고여서 썩고 이런 것들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어쨌든 대전천을 신속하게 친환경 하천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대전천에 하수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원천적으로 오염원을 차단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훨씬 더 깨끗한 천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청호 물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최상류 지역으로 해서 사계절 일정 수위를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가볼까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질을 제대로 깨끗하게 확보하고 유량을 늘려주고 환경을 제대로 가꿔서 대전천도 명품하천으로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천이,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 때 지금 경기도지사 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 부총리 때 국가하천으로, 특히 유등천 합류지점에서 동구 대성동 합류지점까지, 절암천 합류지점까지 한 7.86km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때 국가하천으로 2020년도에 승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최종 잔여구간 13km가 조금 넘습시다만 지난해 12월에 환경부에 국가하천 승격 건의를 했고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국가하천이 되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들 이런 것들 국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만 평상시 관리할 때 우리가 거기에다 좋은 시설을 넣어야 될 때 꼭 중앙정부,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 예산이나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는 국가하천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나머지 하천도 국가하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여성들만 이용하는 시설, 저는 이걸 아주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가족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여성들, 가족들, 부부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남녀 양성평등에 대한 대전환이 있었고 또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원, 그동안 남녀 평등분야에서 남성들 중심의 여러 가지 정책이 되어 왔었고 어느 조직이든 남성이 더 굉장히 숫자도 많고 또 주요 정책 결정을 하는 부분에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으로써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균형이 맞춰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부족한 정책은 서로 보완해가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성가족원의 시설들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만 여기에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정책을 소홀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시설을 보다 시민들, 남녀가 골고루, 가족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평상시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또 이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ですよ.

의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성가족원 부분은 앞으로 기능과 조직, 인력 그리고 특히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한번 이에 대한 개편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성가족원에 특히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제과제빵, 한식조리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운영하고, 시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에 모든 분야의 민간영역까지 다 들여와가지고 여기서 자격증반을 운영하면 민간영역에서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학원들 이런 데는 다 망하는 거거든요.

바리스타 학원도 다 망하는 것이고 제과제빵 학원도 다 망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원이든 평생학습진흥원이든 민간영역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케이스의 어떤 영역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간영역을 최대한 살려 주면서 민간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여성가족원 문제도 한번 시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해보고 또 시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한번 시민들 전체가, 이 기능이 확대 개편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원에 엄마하고 아들딸도 같이 가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개편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의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좋은 도시를 위해서 1동 1도서관 체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나아갈 때 전체 도서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 기능의 도서관이 필요하고 또 기존의 도서관 개념이 과거에 책을 빌려 보고 거기에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고 이런 기능보다 시민들이 평상시에 가서 교류하고 함께 이용하고 다양한 시설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서 여러 가지 모임도 할 수 있는, 요즘 새로운 기능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도서관 대부분이 아직도 과거의 도서관 기능에 상당히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건립하고 있는 동대전시립도서관이나 관저에 하려고 하는 제3시립도서관이나 앞으로 설립되는 도서관들의 기능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개편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담당국장이나 과장도 전국의 도서관들 계속 바라보고 또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의원님들께서도 여건이 되시면 전국에 시립도서관 운영하는 도시 중 가장 기능이 뛰어난 도시들 한번 함께 공무원들하고 보시면 훨씬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 지금 24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올해 두 곳, 특히 유성구하고 대덕구에 하나씩 하게 되고요.

2025년에 동대전시립도서관이 개관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관저에 제3시립도서관 그리고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중앙도서관 성격의 최고 시설과 어떤 기능을 갖춘 도서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뭐냐면 도서관들이 국비지원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를 감안해서 도서관을 설립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중구 의원님이시니까 중구 걱정을 하시는데 중구는 어쨌든 대전 최초의 시립도서관이 중구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문학관 조성을 위해서 헐지 않고 리모델링하기로 했고, 한밭도서관이 어쨌든 시립도서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기능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구지역에 구립도서관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구청장님도 지금 중구에 도서관 건립을 검토하고 계신데 중촌동

에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원 땅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음악전용공연장, 시립미술관들로 특화하기로 정해서 중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중촌동에 하고 싶어하시는데 좀 더 위치를 서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중구 구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넓히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1동에 1도서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구청장 할 때 자양동주민센터,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이름도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홍도동 옛날 주민센터 그곳에 도서관을 결합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민센터를 새로 지을 때 거기에 도서관을 넣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서직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사서직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개방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부 시민들, 도서관 사랑하는 분들 함께해서 일부 정책으로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앞으로 전 동에 도서관 확충하는 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구에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앞으로 기왕에 도서관을 지으려면 정말 시민들이 가서 책을 빌려 보고 책을 반납하고 또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중간고사나 이런 거 볼 때 가서 공부하는 이런 도서관이 아니고 그런 도서관을 훨씬 뛰어넘어서 시민들이 늘 가고 싶은 이런 곳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위치나 이런 걸 해주시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시의원님들도 시의회에 있으십니다만 저는 항상 지방자치는 우리 스스로 일군다는 기본 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개 구는 5개 구청장 중심으로 정책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이런 정책개발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우면 시에 지원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가 일방적으로 내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구의 이런 도서관 문제도 중구청장님이나 중구의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시에 협조요청을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능하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박주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주화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라. 이효성 의원(일괄질문)

(11시 46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이효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효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의원 국민의힘 대덕구 제1선거구 이효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분주하게 뛰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신탄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발생 후 인근 학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해 주신 설동호 교육감님과 관계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후된 대화동 1·2산업단지 관련하여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 정책질문을 드립니다.

얼마 전 확정 발표된 국가산업단지 160만 평 신규 조성사업은 대전의 미래를 열 것입니다.

이제는 과학과 산업의 도시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하지만 대전시 본의와는 관계없이 민선 8기 핵심공약인 5백만 평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주로 산업단지의 양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상대적으로 기존 노후된 대전 대화동 1·2산단에 대한 리노베이션 의지와 이에 따른 투자계획을 산업계와 지역사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산업단지 조성 공약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산업현장과 기업인들은 노후산단에 대한 발전과 투자계획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실장님!

우리 시 대화동 1·2산업단지 등 노후산단 투자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 또는

사업진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1·2산단은 공해와 도심과 인접하여 토지이용의 한계와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토지이용 합리화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각종 기반과 시설을 지원하는 조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2009년 1·2산단이 9월 국토부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되고 같은 달 28일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거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이 1·2산단을 혁신과 발전의 계기로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지난해 국토부와 산자부의 산단대개조 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총 5,875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이나 행정체계의 구축 상황, 전문가 및 주민참여 방안, 사업발굴 현황, 지방비 부담이나 민자유치, 재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에서는 1·2산단에 찾아온 성장 거점의 기회가 실패로 반복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산단에는 아스콘 및 시멘트 등으로 대표되는 도심에서의 부적합 업종과 입주 제한업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 대전시 고시인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에는 2026년 8월까지 제한업종의 유지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3년 남았습니다.

면적만 23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곳에 제한업종 기업의 이전 및 업종 전환을 위한 대체용지 공급계획, 대상 기업과의 이전 협의 진행 등을 면밀히 준비하시는 지 의문입니다.

노후된 1·2산단 재생을 통한 첨단업종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시 준비상황은 어떠한지 시민들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1·2산단 내 버스노선 확대, 대안 및 주차환경도 개선해야 할 숙제입니다.

현재 1·2산단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으로 316번, 616번 버스가 운행되지만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구 및 유성구 방향에서 진출입하는 노선이 없어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021년 12월 한샘대교가 개통했지만 버스노선이 신설되지 않고 있는 것에 개선이 요구되며 마을버스 형태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리고 대전산단재생사업을 통해 대화동 등에 공영주차장 4곳이 지난해 조성되었습니다.

4개소 약 1천 1백여 개 주차면을 확보했지만 산단 내 도로망 확장이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환경 개선이 쉽지 않은 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산단근로자를 위한 버스노선 및 주차장 조성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산단 내 일방통행 등 전문가집단의 교통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택구 행정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계족산은 대전 시내와 근접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아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계족산 황톳길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100선에 네 번 연속 선정되어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는 명소입니다.

시장님도 계족산을 휴양림으로 지정하고 향토식물원, 친환경놀이터, 캠핑장 등 산과 어우러진 명품휴양지로 만들 계획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대전을 중부권 최고의 산림복지·휴양 거점도시로 탈바꿈에 있어 계족산 휴양림 등의 조성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이를 묶어 관광자원화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는데 이곳을 대덕의 역사·문화 관광벨트로 구축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휴양지로 거듭나도록 행정역량이 필요합니다.

계족산 휴양림 조성이 장동 중심으로 진행되는 바, 휴양림 조성계획 발표 이후 그동안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요.

또한 계족산과 대청호 연결도로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장동~이현동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단절된 지역을 잇고 접근성을 높여 개발을 촉진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추진단계가 관계부처로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 산하 공공기관 대덕구 건립·이전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서는 대전시에 계신 지가 반평생은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신도심 개발과 인구 이동에 따라 대덕구의 경제적·사회적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고 현재까지 침체의 늪에 있습니다.

대전의 모든 지역이 상생발전해야 대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대덕구에 방문하셨을 때 균형발전과 지역 숙원사업 추진을 통한 대덕구 재창조 의지를 보여주셨고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 내 지역균형발전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현재 대덕구에는 시 산하 공기업,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의 재배치가 어느 지역보다 절실합니다.

시립도서관, 시립복지관, 시립미술관 등은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곳이자 남녀노소 누구나 애용하는 공간입니다.

대전시의 공공기관 이전 의지가 높은 만큼 대덕구에 ‘시립’ 명칭이 붙는 기관 건립·이전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진수 부교육감님께 교육행정 질문을 드립니다.

학교에 식재된 수목은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 학습공간 제공과 함께 정서순화를 돕고 더 조화로운 녹지 제공으로 학습 피로도를 경감시켜 줍니다.

하지만 배움터이자 추억의 공간인 학교 운동장은 축소되고 학교 역사와 함께해 온 수목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전교육청 산하 학교 및 기관 3백여 곳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수목이 대부분 30년이 넘어 고령거목화되었을 거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학생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목은 항상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계절별, 수종별 관리유형이 다르므로 1년 이상의 생태주기별 집중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에 개별적인 전문진단과 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교육현장의 여건에 맞도록 수목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부교육감님!

학교 수목에 대해 장기적 안목을 갖고 탄소중립 및 수목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리지침, 학교에 식재된 수목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수목관리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 목으로 편성하여 안정적으로 수목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교에는 교사, 공무원, 공무직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진 삼원조직으로 분야별 업무 이해득실에 따라 참여하고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업무가 상충되는 점점 및 서로 미루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간 갈등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제7조에선 정원 관리의 일반원칙을 두고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사업계획, 업무량, 근로조건, 재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청이 인력운용계획 등을 제대로 수립한다면 현장에서의 갈등은 보다 줄어들 것입니다.

협력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교사,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현장 갈등 해소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과 함께 향후 학교 신설, 폐지, 퇴직, 사업변경에 따른 정원 조정 및 공무직 조직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직종전환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부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효율적인 인력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계획과 추진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제기한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교육청에서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행정부시장 이택구, 부교육감 김진수)

(11시 59분)

○의장 이상래 이어서 이효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까.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이효성 의원님께서서는 대전1·2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도시의 균형발전과 대중교통 등 다양한 시정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산단 투자에 대한 대전시의 구체적 추진계획 및 사업 진행여부에 대

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노후화된 대전산업단지 재생과 부족한 기반시설 해소를 위해서 2009년 9월 국토부로부터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010년부터 총사업비 3,071억 원을 투입해서 대전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12월 시비 450억 원을 투입해 한샘대교를 개통해서 대전산단에서 둔산동 주거지역으로 진출입하는 교통여건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도로정비 28개 노선 12.9km에 대한 공사를 2017년 1월 착공해서 현재 70% 공정률로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겠습니다.

둘째, 2021년 7월 착수한 LH 전면매수구역 기반시설 공사는 금년 말 산업용지를 분양하고 2024년 11월까지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셋째, 대전산단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4개소에 총 751면을 계획했으며 대화동 복합문화센터 내 주차장 1개소는 금년 6월 공사가 완료되어 금년 7월부터 117면의 주차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주차용 건물 3개소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완충녹지 조성사업으로 5개소에 14만 3,600㎡를 조성할 계획인데 현재 3개소 7만 7,900㎡에 대해서는 163억을 들여서 보상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회 추경에 140억 원의 보상비를 편성해서 1개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서는 산단 대개조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산업추진 전담조직 구성이나 확대 등 행정체계 구축 상황, 전문가 및 주민참여 방안, 사업발굴 현황, 지방비 부담이나 민자유치 등 재원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전담조직 구성 등 행정체계 구축 상황으로는 경제과학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대전산단 혁신계획추진단을 2022년 8월에 구성해서 전략사업추진실 산업입지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발족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에 시청 사무관 두 명을 파견해서 같이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전문가 및 주민참여 방안으로는 한남대학교 등 2개 지역대학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등 3개 관리기관의 실무 TF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대덕구청과 관계기관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발굴 현황입니다.

대전산단 대개조 세부사업은 정부 메뉴판사업 42개 중에서 대전산단과 연계산단, 즉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적합한 33개 국비사업과 자체사업 4개를 포함해서 총 37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875억 원으로 국비 3,000억 원, 지방비 1,368억 원, 기업체 자부담 등 민간자금이 약 1,500억 정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단 대개조사업은 지원대상 지역 선정만으로 사업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만 국비가 확보되는 사업으로 신규 국비사업의 발굴을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과 협력하고 타 시·도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여 기이 선정된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비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비 및 민자유치 등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산단대개조사업 선정 후에 그동안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서 부처 연계형 노후산단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4개 사업에 국비 25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비 192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계속 방문해서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가면서 실무 TF 회의 등을 통한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국비사업 공모에 응모하는 등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대전산단 제한업종 전환을 위한 대체용지 공급, 대상기업과의 이전 협의 등 준비상황 및 노후화된 1·2산단 재생을 통한 첨단업종으로 전환을 위한 우리 시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전산단 제한업종 전환을 위한 준비상황입니다.

그동안 대전산업단지 재생계획을 통한 입주 제한업종 관리로 2012년 9월에 134개사에서 금년 5월 현재는 74개사로 총 60개사가 업종 변경 및 이전하는 등의 감소 효과가 실제 있었습니다.

대전산단 내 입주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도심부적격 업체인 아스콘, 레미콘 등 업체 이전을 위한 대체용지 마련을 검토하였으나 사실 레미콘 업체들은 이전 등에 대한 의사가 없었습니다.

대체용지를 마련하더라도 강제이주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주 제한업체의 자발적 업종 변경과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입주해 있는 입주 제한업종 대표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일부 업체들은 현재 입주 제한 유예기간이 있는데 유예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들어서 도심 부적합도가 높지 않은, 좀 낮은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부 유예기간 연장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후화된 1·2산단 재생을 통한 첨단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아스콘, 레미콘 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대전산단 갑천변 편입지역, 그러니까 갑천의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거기가 한 10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활성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1단계 사업인 LH 전면매수구역이 한 3만 평 되고 거기에 인접한 1만 6,000평 정도 되는 지역에 대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국토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에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2028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갑천변 오른쪽 10만 평 중에서 4만 5,000평은 우선 업종전환을 202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만 평 중에서 5만 5,000평 정도 지역에 대해서도 3단계, 4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2035년까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해서 첨단업종으로의 전환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있는 아스콘, 레미콘 회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갑천변 편입지역 외에,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산업단지 안쪽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산단 내부에 폐업이 돼서 공장부지가 나온 게 있는데 이 부지들에 대해서 보셨겠지만 민간 지산센터가 현재 2개가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완공이 돼 있고 또 하나의 민간 지산센터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지산센터의 유치를 노력하고, 대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신·증설이 필요한 업체들이 계속 우리 시에 요청이 있는데 그 업체들을 이 산단의 폐업 공장부지를 매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업종전환을 할 건데, 잘 아시겠지만 구로공단의 변화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구로공단이 과거에 한 50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많이 이끌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폐허화됐었는데 거기에 지산센터들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고 해서 많은 IT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대전산단을 첨단업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산단 내 버스노선 확대 및 주차환경 개선 그리고 전문가 교통연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버스노선 개선 및 주차환경 개선방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전산단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2개 노선인데 앞으로 서구, 유성구에 거주하는 산단 종사자들의 대전산단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연말에 1개 신규 노선을 신설할 계획인데 이 노선은 유성구 원내동에서 도안동 그리고 둔산동을 거쳐서 대전산단을 경유해서 대한통운으로 빠지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안이나 둔산 쪽에 있는 근로자들의 대전산단 출퇴근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대전산단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둔산 인근지역을 돌 수 있는 셔틀버스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전문가의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은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확장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교통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서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추가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효성 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지적에 감사드리고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향후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택구 행정부시장입니다.

이효성 의원님께서 계족산 휴양림 개발 그리고 관련 도로망 구축, 시 산하 공공기관 건립 또는 이전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안에 대한 세심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계족산 휴양림 개발 추진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계족산 휴양림은 지난 2022년 12월에 산림청으로부터 휴양림으로 신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장동 산림욕장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확대해서 휴양림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산림욕장하고 휴양림의 가장 큰 차이는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산림욕장이 휴양림으로 전환되었다는 얘기는 휴양림 속에 숙박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계족산 주위의 여러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체류형 휴양단지 같은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가 21만 평 규모고요, 사업비가 290억 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고 완공시기는 2026년 말 정도면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심사

라든가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은 2월부터 추진 중에 있고요,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바 있습니다.

관련되는 계획 수립 또는 설계용역이 올 하반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도 같이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 사유토지 매입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한 185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매입예산을 편성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장동지역에 장동문화공원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문화공원 그리고 그 주위에 목원대학교 부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산디마을이라든가 관련되는 지역에 기존의 자원과 잘 연계해서 계족산 휴양림이 체류형 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 시와 자치구의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 관련 사업의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장동하고 이현 간 도로개설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장동하고 이현동 구간을 연결하는 1.7km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현재 계족산, 그러니까 장동지역에서 대청호 쪽으로 가려고 하면 신탄진을 경유해서 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리를 보면 한 17km 정도 나오는 걸로 보여서 이 도로가 완성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동거리나 시간이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4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현재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신규사업으로 제출이 돼서, 전체 사업비가 248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 신청을 했고 현재 중앙부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행안부에서 기재부로 제출이 됐고 현재 동향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에 있습니다,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전체 사업규모 파악 후에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심사결과가 잘 나오면 국비사업 반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노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다시 또 탄약창이 위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

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다양한 사업들로 문을 두드렸는데 현재 어쨌든 이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 산하 ‘시립’ 자 들어가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건립하거나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가균형발전 추진하는 거나 도시에서 도시균형발전 추진하는 거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의 어떤 사업을 유치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지역이 그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의 장점이나 잠재력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유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기관이 부족하거나 낙후돼 있거나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여건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우리에게 유치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덕구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동안 그런 기관이나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원구역도 있고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것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들이 대덕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해서 연축동 지역하고 역세권 두 군대를 국가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지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혁신도시 시군1의 경우를 보면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으로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기관들이 이전된 경우가 있어서 10개 혁신도시 성과를 분석해 보면 지역혁신, 또 지역발전에 연계되는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기관들을 먼저 유치해 달라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미 원도심, 같은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일부가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출퇴근 거리가 비슷한, 대도시 안에서 중구에 있는 걸 대덕구로 옮긴다거나 이러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 지방에 내려오면 따라오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아파트 같은 것도 건립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기존의 기관을 쪼개는 그런 형태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이전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담을 수 있는 연축지구 개발이라든가 현재 대덕구청사, 오정동청사 이전에 대해 이후에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노력들을, 개발계획들을 잘 수립해서 일단은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놔야 시설이나 기관 유치가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관들을 이전하는 데에는 해당 기관의 특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 건축, 건물의 여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따져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균형적으로 잘 살피가면서 하긴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 만드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대덕구청장님 뵙고 여러 가지 10개 이상의 사업들을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고 대덕구에서 원하는 방향 또 원하는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주심사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균형발전하면서 적합한 기관들이나 시설들이 위치해서 지역발전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택구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존경하는 이효성 의원님께서 자연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 내 수목관리 방안과 학교 내 구성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내 수목관리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학교 내 수목이 크고 수종이 다양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교육청은 관내 300여 개 학교에 대한 수목관리를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번 추경에 11억 6,900만 원을 편성해서 교내 수목의 종류와 위치 등이 표시된 수목지도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조경 전문업체를 통해서 수목 전정작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교육청은 앞으로 교육시설 시행계획에 학교 내 수목관리를 추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내 구성원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계획과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직원 체계적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중장기 교육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교육공무직원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와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에 따라서 사업계획과 업무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원을 책정하는 등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교육청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및 근무환경 등의 진단을 위해 조직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서 소수직종에 대해 유사직종군으로 직종전환을 유도하고 직종 내 다양한 근무형태와 세부직종명으로 혼재된 직종은 직종 단일화 추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현원은 2022년 대비 현재 5,168명으로 이미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인 4,536명을 초과하여 인력증원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 체결된 단체교섭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인력구조를 개선하기에는 근로자 동의라든지 노조와의 협상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조직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타 시·도의 교육공무직원 직종 통합 방법 및 운영 우수사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 업무접점이 많은 돌봄 분야에 우선 집중해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학교업무 경감이라든지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현장과 소통하면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상호 협력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구성원 간 갈등을 최소화하며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이효성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이효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효성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오늘 네 분께서 시정과 관련해서 세심한 정책적 제안들을 많이 주셨고 또 시가 부족한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안들 잘 검토해서 더 보완하고 때로는 정책을 더 가다듬어서 시정이 보다 더 발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언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2시 29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2. 휴회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출석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의사담당관	권승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행정부시장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복지국장	민동희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철도광역교통본부장	조철휘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소방본부장	강대훈
인재개발원장	김기홍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승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감사위원장	김선승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홍보담당관	이호영
정책기획관	권경민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부교육감	김진수
기획국장	엄기표
교육국장	정홍채
행정국장	오광열
감사관	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